발표 2

새마을 운동–과연 전파할 만한 "농촌 살리기" 운동인가?

민경일 사무총장((재)바보의나눔)

새마을 운동 – 과연 전파할 만한 "농촌 살리기" 운동인가?

민경일 사무총장((재)바보의나눔)

0. 들어가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초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가입국이 됨으로서 공식적으로 공여국 대열에 들게 되었다. 2010년의 G20 정상회의와 2011년의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준비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주 강조하여 말하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자랑스러운 공여국인가? 아니 적어도 우리나라는 부끄럽지 않은 공여국인가?

개발도상국과 함께 하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이행 과정은 과연 내세울 만한 것일까?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이전 정부부터 매우 강조되던, 이른바 "새마을 운동 ODA" 가 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매우 큰 탄력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2월에 있었던 '세계개발원조총회(4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에 있어 성공과 더불어 실패의 경험까지도 공유하겠다" 고 했으며, 이는 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새마을 운동 ODA" 를 더 발전시킨 'Millennium Villages Project(이하 MVP)' 로 발전되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있어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 중, '새마을 운동' 이 과연 지구촌의 곳곳에,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에 '도움' 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부에 있어 정책 결정 수준의 의미 있는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새마을 운동이 과연 우리나라의 자랑할 만한 발전 경험인지를 먼저 살펴 볼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MVP는 개발도상국들을 향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

을 지에 대한 논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진정한 개발은 '인간 자유의 확장 과정(Amrtya Sen)' 이며 결코 단순한 경제 성장으로 인식되어서는, 그리고 그렇게 시행되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1. 오늘날 한국의 농촌과 새마을운동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초반 농촌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장된 일종의 사회개혁 운동이다(박진도, 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역사비평", 1999). 공식적으로도 10년 이상이 지속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만이 아닌 전국토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내용을 농촌 새마을 운동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것은 새마을 운동 자체가 농촌 새마을 운동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MVP는 우리나라의 농촌 새마을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2014. 03)에서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농촌지역 새마을운동에 그 초점을 맞춘 것을 본다면, 지금의 논의에서 새마을 운동을 농촌에 한정지어 논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 새마을 운동을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농촌 잘살기 운동' 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의 농촌이 잘 살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짐작은 단순히 진실을 넘어 진리에 가깝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농촌은 잘 살게 되었는가? 만일 우리 농촌이 새마을 운동의 결과로 잘 살게 되었다면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MVP에 대한 무조건적 우려는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 그와 같지 않다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또 이를 바탕으로 한 MVP는 올바른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1.1. 2014년 대한민국의 자화상

① 우리의 농촌은 행복한가?

물음은 과연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가 행복한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새마을운동이 농촌 잘살기 운동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 운동이었다면, 분명 지금의 우리

농촌은 잘, 그것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가 OECD DAC 회원국임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OECD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있음을 또 알고 있다. 한국은 OECD에서 저임금 고용 비중 1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이상 2010년 기준). 이 외에도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은 더 많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2012년), 노인 복지 지출 최저. 그 외에도 불명예 1위는 아니지만, 대외 원조 순위에서 늘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부분은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1위의 불명예는 바로 몇 년째 변치 않는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자살률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의 통계를 보면,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의 자살률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대한민국 자살현황 연간보고서" 를 보면, 충청도와 강원도가 가장 높은 바살률을 보이는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도심지역이 자살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지방 지역이 자살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고 말하고 있다(2011. 12).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 지역 노인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데, 이들의 주로 살충제 음독을 통한 자살을 택하며 주로 농촌 지역 거주라고 통계는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물음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는 과연 행복한가?" 우리의 농촌이 정말 '잘' 살고 있다면 이들이 불행감과 무력감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니면 혹시, 이 자살률이 말해 주는 대로 우리나라의 농촌이 진짜로 덜 행복한 것은 아닐까?

표 3. 시도별 자살률(연령비보정)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21.8	24.8	26	31	31.2
서울특별시	17.1	20.1	21.6	26.1	26.2
부산광역시	22.3	25.5	27.4	32.1	32.9
대구광역시	20.3	22.8	25.4	29.3	29.7
인천광역시	22.4	23.4	27	31.2	32.2
광주광역시	16.5	22.6	21.5	28.4	30.7
대전광역시	22	24.1	22.7	31.1	29.2
울산광역시	16	18.9	21.9	24.8	24.4
경기도	20.5	22.1	24.1	28.9	29.5
강원도	31.6	37.4	38.4	43.6	44.4
충청북도	28.2	31.1	33.6	42	35.9
충청남도	31.7	37	35.4	45.8	44.6
전라북도	25.4	31.8	30.4	35.7	33.2
전라남도	22.5	25	26.8	31.3	33.9
경상북도	26.3	29.9	28.8	34.3	35.4
경상남도	25.6	29.1	28.9	31.5	32
제주특별자치도	20.4	24.9	28.9	32.6	31.4

(/100,000명)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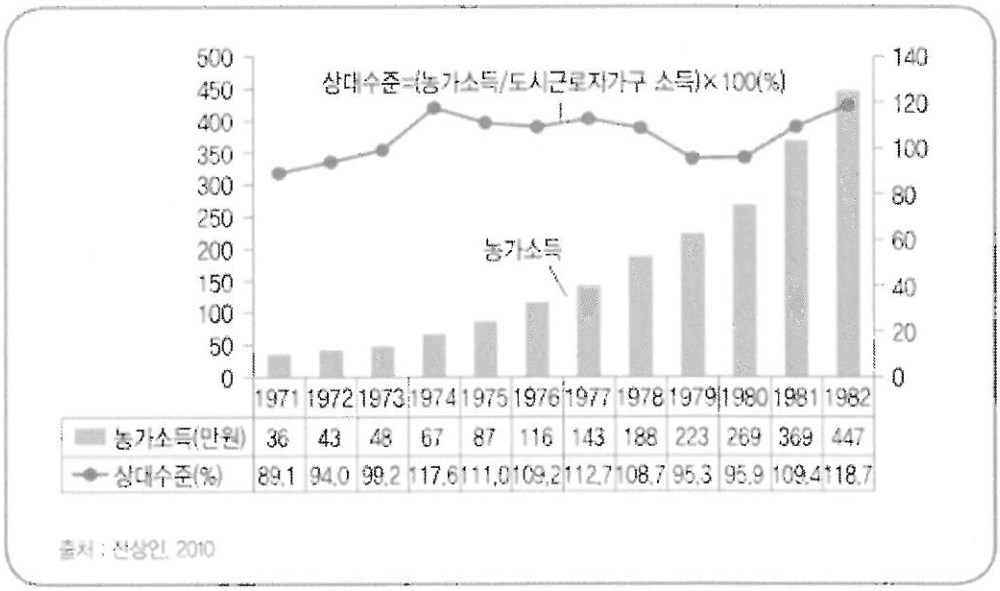
② 도농 소득 격차의 심화

우리나라는 자주 '삶의 질' 에 대해서 논하지만 실상 이를 측정하는 지표 개발에는 매우 미약하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행복 지수' 등에 대해 우리나라에 관계된 이야기를 일상 중에 듣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경제 문제' 가 최대 현안이라는 논리에 설득당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선거 때마다 주요 후보자들은 '경제 살리기' 를 최대의 화두로 삼는 전략을 택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경제 문제' 로는 농촌의 불행을 설명할 수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의 도시 임금근로자와 농업인 간의 연간 소득 격차는 무려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2인 이상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103만원이었지만 도시 임금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5391만원이었고, 이를 비율로 정리하면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57.6%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한국정책신문, 2013년 8월 7일자 기사). 그런데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본래 이런 것이 아니었다. 동 기사에 의하면 1994년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을 2031만원대 2023만원으로 근소하게 앞섰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IMF 이후인 1998년부터 도시 근로자 대비 79.9%, 2008년에는 65.2%, 2011년에는 59.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새마을 운동의 시절부터 비교해 보면 좀 더 의미있는 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다시 한 번 물음을 기억하자. 새마을 운동은 과연 농촌을 잘 살게 해 주었는가? 2011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새마을운동 모범사례" 본문에 나온 통계를 보면, 새마을 운동의 시작 시점 부근인 1971년에 농가 소득은 도시 대비 89.1% 수준이었다. 이후 농가 소득은 점차 도시 소득에 접근하기 시작하여, 1974년부터 5년간은 도시 소득을 앞지르기도 하였다. 이후 유신이 끝나게 된 1979년에는 잠시 도시 대비 95% 수준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1981년과 1982년에는 다시 농가 소득이 도시 소득을 다소나마 앞지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농가소득(만원)	36	43	48	67	87	116	143	188	223	269	369	447
상대수준(%)	89.1	94.0	99.2	117.6	111.0	109.2	112.7	108.7	95.3	95.9	109.4	118.7

출처 : 전상인, 2010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의 농가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도시 근로자들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는 더 빈곤해졌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인 빈곤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이다. 농촌 살리기 운동에 전념을 다 한 국가에서, 농가의 이같은 상대적 빈곤 현상과 불행(높은 자살률과 극심한 고령화로 인한 소외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운동은 과연 성공한 농촌 살리기 운동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1.2.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다시 새마을 운동으로 돌아와 보자. 박진도, 한도현은 앞서 인용한 논문에서 "농촌 새마을 운동이 10월 유신의 통치 방식인 대중 동원(populism)에 기초한 강압적 억압적

통치 방식이 농촌 지역의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드는 과정이었다" 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사업은 매우 권위주의적, 급진적, 대중동원적, 관료주의적,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대포적으로 통일벼의 도입과 보급도 매우 강제적,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의 시멘트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던 새마을 운동은 이 과정에서도 강압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1970년, 전국 35,000 마을에 300여 부대씩 지급된 시멘트로 인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16,000 마을에 대해 시멘트 500 부대와 철근 1통씩을 차등지원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박정희는 이 때 "신상필벌의 원칙은 바꾸지 않겠다" 고 강조했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상을 내릴 수는 있다 하여도 (상대적으로 게으르다 하여) 벌을 내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지극히 권위주의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추세로 당시 농촌 새마을 운동은 주민들에 의한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경제성의 원칙이나 기타 효과보다는 물량적인 가시적 성과가 뚜렷한 사업 우선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이는 어쩌면 오늘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개발 방침이 아닌가 하겠다.

① 농촌의 외화내빈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마을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거 환경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새마을 운동의 최대 성과로 여겨지기도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환경 개선 사업이 점차로 권위주의적 강제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고, (다른 마을과의 경쟁 등의 요인에서 기인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은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을 받았다. 실제로 새마을 운동은 소득 증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겉치장에 주력했기 때문에 우수 새마을 혹은 성공사례로 선전되는 마을일수록 주민들은 빚에 허덕이게 되었다(박진도, 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② 도농 간의 격차와 농가 부채의 급증

한편 새마을 운동이 농촌 잘살기 운동이며 동시에 농촌 소득 증대 운동이었음에도 도대체 왜 농촌이 '진짜로' 잘 살게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새마을 운동의 투자 재원을 볼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의 재원은 100% 정부 투자가 아니었으며, 특히 새마을 운동의 초

기에는 대부분의 투자재원은 주민들에 의해서 부담되었었다.

새마을 운동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1971년 122억원 → 1979년 7,582억원), 주민들의 투자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1971년 81억원 → 1979년 3,282억원, 약 43.3%). 운동 초기에는 마을 가꾸기가 중심이었기에 주민들은 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했으나, 새마을 운동이 물질적 투자가 중요한 소득 증대 사업이나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주민의 부담은 노동력보다는 현금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보유한 현금 뿐 아니라 융자를 받아서 정부의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잘살기 운동과 소득 증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부채는 거꾸로 늘어나게 되었다. 농림부의 1999년 통계를 보면 새마을 운동의 초기인 1971년에 가구당 16,000원이던 농가의 가구당 부채가 새마을 운동의 막바지인 1980년에는 가구당 339,000원의 부채로, 그리고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5백만원에 육박하게 되었다. 농가의 부채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2012년에 이르러서는 농가의 평균 소득이 3,103만원인데 비해 부채는 가구당 2,726만원에 이르게 된다.

농가의 부채 증가는 단순히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대응 투자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1971년부터 도입된 신품종 쌀인 통일벼는 수확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기는 했으나, 물 사정이 좋아야 하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빨리 심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미질(米質)이 나빠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기피했다고 한다. 또한 면역성이 나빠 병충해가 빈발하며, 볏짚이 짧고 힘이 없어 새끼를 꼬지 못하게 되어 농한기의 유일한 수입원인 볏짚 가공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이 신품종을 반기지 않았으나 당시의 지방 공무원들은 재래종 벼를 심은 못자리를 장화로 밟아 가면서 신품종을 보급하려 애썼다.

이러한 신품종의 보급은 농가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켰다. 본래 농민들은 자신의 농산물을 자가 소비하고 남는 것을 시장에 팔았으나, 신품종은 처음부터 시장 판매를 위한 생산이었다. 이에 따라 농가 경제가 자급경제에서 상품경제로 전환하게 되며 농가 지출이 급속히 증대했다. 비료, 농약, 농기계 구입 비용 등 새로운 지출이 만들어 졌고, 특히 TV의 보급은 자본주의의 소비문화를 농촌에 깊숙히 침투시키는 역할을 했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농가 소득은 26만원에서 270만원으로 10.5배 증가했지만 같은 시기에 부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6,000원에서 340만원으로 21배나 증가했다. 부채 증가가 소득 증가의 정확히 두 배씩이 된 셈이다. 게다가 이들 농가부채의 절반 가량은 연체이자가 매우 높은 사채였기에 농촌의 경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피폐해지게 되었다.

③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학자들은 새마을 운동이 무엇보다 '정신 개조 운동' 이었음을 강조한다. 곧 근면•자조•협동으로 대표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및 현재 정부의 홍보성 연구를 넘어서 본다면 이 운동은 농민 스스로의 운동이었다기 보다는 국가 주도의 사회 운동 내지는 정치 운동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면•자조•협동은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농민들이 발견해 낸 덕목이라기보다는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찬양하고 해외에 소개할 때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나타난 근면•자조•협동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정신은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것이라기보다는 동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기의 협동은 자발적인 협동이 아니라 관에 보이기 위한 협동이었다. 이는 그 당시 정부의 강제성을 비판하던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건의사항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특히 다른 모든 마을을 경쟁 상대로 만드는 이른바 '인센티브 방식' 은 새마을 운동에서의 협동의 한계와 의도를 생각하게 한다고 하겠다.

당시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새마을지도자' 도 사실은 그들에게 부여된 정치적 사회적 혜택을 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다. 새마을지도자는 이장과 지도자를 번갈아 맡아 가면서 농촌에서 유지 노릇을 하고 마을 단위에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시 내무부에서 발간한 "새마을운동 10년사" 에도 '리동개발위원회' 가 하향식으로 조직되었고 처음부터 주민과는 거리가 멀게 탄생된, 내무부의 행정 지시로 조직된 것이라는 점을 능언하고 있다.

1.3. 누구를 위한 새마을운동이었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새마을 운동이 진정한 '농촌 잘살기' 운동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긍정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분명히 새마을 운동 당시에 이미, 그리고 오늘날 더욱 피폐해진 우리 농촌의 현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운동이었는가? 물론 이를 유신 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보는 학자들에게는 당시의 정권이 그 제일 첫 번째 수혜자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는 해도 농민들이 과연 실제로 더 잘 살게 된 수혜자였는가에 대한 동의를 하기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은 농촌을 위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그의 정권 초기인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

이나 중화학공업 기업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었고, 이러한 기조는 농촌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글의 서두에서 이미 새마을운동은 한 기업(시멘트)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1960년대의 우리나라의 실질 수출금리를 보면 196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물가상승률을 밑돌아 마이너스 금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동훈, "발전국가론과 한국의 산업화", 《마르크스21, 11호》, 2011). 기업측에서는 이자를 오히려 받아가면서 대출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 앞서 언급했던 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쌀 20Kg 가격은 2000년에는 44,815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오히려 하락해 44,197원이었다. 하지만 요소비료 가격은 같은 기간 20Kg 기준 5300원에서 12,850원으로 크게 뛰었다. 같은 기간 농가의 부채가 끊임없이 증가했다는 점을 다시 떠올린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수록 그들은 가난해지고, 대신 배를 불리는 편은 따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스템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새마을운동은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개발도상국에 대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려

2014년 3월에 작성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안)"을 보면 한국 정부가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자조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사업추진', '인센티브 정책 추진', '역량 있고 헌신적인 지도자 육성', '소득증대 추진' 등을 뽑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요인들은 하나같이 본고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에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 게다가 계획안 안에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만 언급되어 있을 뿐,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11년 개발원조총회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나누겠다"는 말은 이미 공약(空約)이 되어 버린 것인가?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가의 브랜드 제고에 큰 방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OECD에서 개발협력 금액이 GNI 기준으로 꼴찌에 가까우며, 2010년 UN 총회에서 약속했던 0.25%의 공약도, 2012년 OECD/DAC의 동료 검토(Peer Review)에서 권고된 사항들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우리의 대외원조 브랜드가 땅에 떨어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 전략이 이미 우리나라에서조차 성공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를 들

고 나가서 자랑이라고, 우리의 성공이라고 이를 전파한단 말인가? 위원회의 계획안에서는 1970년대 당시 농가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음을 예시하며 이를 개도국에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에서 같은 시기에 농가의 소득 뿐 아니라 부채가 그 두 배로 늘어났음을 보았다. 또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있다. 정부의 홍보안에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비용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농가의 소득은 도시 임금 근로자의 경우처럼 큰 투자 없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파종기와 수확기에는 농기계가 필요하기에 이를 구매 혹은 대여도 해야 하고, 노동력도 사야 한다. 파종할 씨를 구입해야 하고 연중 내내 비료와 농약이 필요하다. 즉 농가의 소득은 임금 근로와 달리 엄청난 현물 및 현금의 투자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농가와 도시의 소득이 설령 같다고 해도 수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개발에 있어 단순히 소득 증대만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소득 증대가 더 큰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경우,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피폐해 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 있어 소득증대는 어쩌면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 중 하나일 것이다. 이와 함께 유통 구조 개선, 올바른 소비 문화에 대한 학습, 부패 요소 제거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듯 어쩌면 그들의 삶은 시간이 지난 후에 더 불행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지구촌 새마을운동, 혹은 MVP는 과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지?(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계획에서는 이러한 통합적인 개발에 대한 시각을 찾아 볼 수 없다.)

본고는 2014년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MVP를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그것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진짜" 새마을운동의 의미에 대하여 숙고해 보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스스로와 MVP의 이행 주체인 우리나라 정부에게 던져 보고 싶다.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 새마을 운동은 과연 성공한 것이며,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권할만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